

☉ 여성 특위, 교육대 성별 모집
직권 조사 의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각 교육대가 실시 중인 '신입생 성별 제한 모집 제도'에 남녀 차별 소지가 있다며 직권 조사를 의결했다.

여성 특위 장성자 차별 개선 조정관은 "전국 11개 교대가 신입생 모집에서 어느 한쪽 성의 비율이 60~7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사실상의 여성 상한선"이라며, "이 같은 '남성 할당제'로 인해 우수한 여학생 대신 성적이 나쁜 남학생이 합격해 차질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성별 제한 모집은 '70년대부터 실시돼 온 '관행'으로 2000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는 △ 서울·광주·전주·진주·공주·청주·춘천 교대가 75% △ 부산·대구·제주 교대가 70% △ 인천 교대가 60%의 성별 제한 비율을 두고 있다. 여성 특위의 직권 조사 결과 남녀 차별로 결정돼 시정 권고를 받으면 해당 대학은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 시행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 교육 대학원 5곳 신설 허가

교육부는 10월 26일 2001학년도에는 나사렛대, 남부대, 중부대, 추계예술대, 한성대 등 5개 대학의 교육 대학원 신설을 허가하고 기존 128개 교육 대학원(교육대 11개, 국·공립대 24개, 사립 93개)의 학생 모집 정원을 올해보다 822명 늘어난 총 1만 9,641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 대학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현제도 공급 과잉인 중등 교사가 추가로 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증원 교육 대학원은 반드시 현직 교사만을 모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설을 요청한 교육 대학원 중 학부에 교직 과정이 없거나 2000학년도에 행·재정 제제를 받은 대학은 신설 요청을 반려했다.

기존 교육 대학원의 경우 '99학년도 이전에 설치한 대학원은 현직 교사 이외의 입학생을 모집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게 되는 경우는 증원을 불허했고 '99학년도 교육 대학원 평가 결과 '우수'나 '양호' 판정을 받은 대학원에 대해서는 일부 증원을 허가하고 '개선 요망' 판정을 받은 대학원은 증원을 불허했다. 아울러 2000학년도에 신설된 31개 교육 대학원 역시 평가 결과 '우수', '양호' 판정을 받은 대학원만 증원을 허용했고, '개선 요망' 판정

을 받은 대학원은 증원을 불허하는 동시에 미개설된 전공을 폐지하고 미달 정원은 감축했다.

☉ 기획예산처, 국제 대학원
내년부터 국고 지원 중단

정부는 국제 대학원에 대해 올해 배정된 100억 원의 예산을 사업 실적 등을 감안, 차등 지원하되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국제 대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14일 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국제 대학원에 대한 예산 집행 점검 결과, 운영 성과 및 집행 체제상의 문제점에 비춰 추가 국고 지원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며 올해를 끝으로 국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대학원에 대해 지난 '96년 이후 올해까지 7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미 집행 예산은 대학의 자체 대응 자금 조성, 활동 내역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되 재정 지원 조건 이행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제 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국제 전문 인력 양성에 있었지만, 나눠 먹기식 예산 집행으로 효율이 감소되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민간 부문으로 진출함에 따라 타 전공 학과, 특히 국제경영학과와의 경쟁이 불가

피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재정 지원에 따라 국제 대학원의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된 만큼 앞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 다른 국제 대학원 및 기타 전공 대학원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점검 결과 일부 대학은 국고 지원액을 대부분 시설 투자에 사용했으며, 국고 지원금 이상의 대응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졸업 인력의 국제 기구 취업 실적도 매우 저조해 지금까지 전체 졸업생 661명 가운데 국제 기구 취업은 20명에 불과했다. 국제 대학원이 설립된 대학들은 그 동안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내년부터 근로자 대학원

교육비 소득 공제

정부는 지난 15일 과천 청사에서 경제부처 차관 간담회를 열고,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연간 1백만원)을 소득 공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장기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실업자에서 6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며, 내년 7월부터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1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이를 통과시켰다.

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점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졸업 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2.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과 통신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 대학 및 교육 대학에 특수 대학원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원을 방송·통신 대학에는 특수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3.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 대학 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의 입학 정원을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100분의 5분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한다.

4. 대학원 학생 정원 관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입학 정원을 계열별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원 별로 총괄 정원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범위 안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한다.

5. 대학의 장이 입학 전형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논술 고사 외의 필답 고사를 치르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초·중등 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정 지원·보조의 삭감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98년 10월 발표한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고교 교육 정상화와 고액 과외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실시를 제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특차 모집은 종전까지의 시험 성적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한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하고,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에 통합하는 등 모집 일정을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으로 이원화하고,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 입학 전형 때 수험생의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신중한 선택과 소신 지원을 유도하도록 한다.

7. 산업 대학 또는 전문 대학에의 산업체 위탁 교육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정하는 등 산업체 위탁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당정, 지방대 육성 특별법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11월 21일 심각한 재정난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초 가칭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 식당에서 민주당 신기남 제3조정위원장과 이돈희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내년 중반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대의 유기적 협력·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권장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수도권 대학의 신규 설립 및 정원 동결, 지방대생 취업 알선 센터 설치 의무화, 기숙사 설치 등 복지 시설 확충,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사립대 교수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이 신분 불안에 따른 것으로 판단, 사립대 재단의 인사 전횡을 막고 교수들의 신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대학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기획예산처, 국립대 병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부는 공공 금융 기관에 이어 연말까지 9개 국립 대학 병원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교육부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립대 병원장 회의를 열어 이들 병원의 퇴직금 누진제를 연내에 폐지토록 하고, 미 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대학 병원의 2001년 예산 지원과 연계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사이버 대학 9곳 인가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대학(원격 대학) 학사 과정 7개교와 전문 학사 과정 2개교의 설치를 승인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 6,2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사 과정 가운데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해 만들어진 대학은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7개과에서 900명을 선발하는 한국디지털대학(KDU) 등 4개교다. 경희사이버대학 등 3개교는 학교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했다. 경북사이버대학과 세계사이버대학은 전문 학사 학위 과정으로 개설됐다.

사이버 대학은 인터넷으로 강의와 학습을 떠맡는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같은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재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공주대·공주문화대 통합 결정

국립대인 공주대학교가 국립 전문대인 공주문화대학을 흡수, 통합해 200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부는 현장 실사 등을 거친 결과, 공주대와 공주문화대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국립대의 통·폐합은 지난 '91년 공주대가 예산농업전문대를, '95년 경상대가 통영수산전문대를, '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통합한 이래 4번째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대

학간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 구조 조정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공주문화대의 간호학과 등이 공주대를 보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전라남도, '학사 농업인 제도' 내년 시행

전라남도는 농촌 인구 이탈을 막고 우수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학사 농업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과대 재학생 가운데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문 영농 교육을 시키고 졸업 후에는 영농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3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농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농업인 10~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사 농업인은 3학년부턴 졸업 때까지 2년간 학사 일정과 별도로 지도 교수와 실습 농가를 지정 받아 방학과 학기 중 이용 가능한 시간에 농업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 등을 받게 된다.

또 이들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1인당 2억 원 이

내의 용자금이 지원된다. 용자금 금리는 연 2%로 정부의 정책 자금(연 5%)보다 싸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학사 농업인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농촌을 살릴 주역"이라며, "이들이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벤처 농업 관련 각종 정보도 제공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학 재단 내·외부 감사 강화

교육부는 12월 5일 대학 및 전문대를 운영하는 사학 재단의 재정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 제도가 크게 강화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 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고 감사 2명 중 1명은 의무적으로 이사회마다 참석해 회의록에도 기명 날인을 해야 한다. 감사 임기도 2년 중임에서 3년 단임으로 조정된다.

외부 감사제는 현행대로 매년 입학 정원 2천 명 이상인 사학은 의무적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감사 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되, 재정·회계 관련 비리가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 지정, 더욱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했다.

문제 사학으로 지정되면 입학 정원과 상관없이 철저한 외부 감사를 받고 자세한 감사 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년간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 국제 대학원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는 12월 7일 지난 '96년부터 5년 동안 9개 국제 대학원의 졸업생 취업, 교수 확보율 등 10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종합 순위는 이화여대가 1위, 경희대 2위, 연세대가 3위, 고려대 4위, 한양대 5위, 한국외대 6위, 중앙대 7위, 서울대 8위, 서강대 9위였다.

항목별 평가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졸업생 761명 중 국제 기구·외교 분야의 취업률은 5.4%인 41명에 그쳤다. '99년 첫 졸업생의 경우 365명 가운데 6.8%인 25명이 국제 기구에 취업했으나 올해는 396명중 4.0%인 16명만이 국제 기구에 취업, 국제 기구 취업률은 더 떨어졌다. 반면 기업체 취업자 수는 '99년 170명에서 올해 215명으로 크게 늘어나 2년간 졸업생의 50.6%인

385명이 기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유학·진학이 15.1%인 115명, 연구·교육·언론 등이 9.7%인 74명, 정부 부처는 3.2%인 24명이었다.

대학원 측은 설립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국제 기구에서는 2~3년의 사회 경험 등을 요구.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 369개 국내 학술지 평가 결과 발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2월 5일 교육부의 의뢰로 8개월에 걸친 'BK 21'의 13개 분야 369개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의 30.3%인 112건이 '국제적 수준'의 높은 등급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이 된 학문 분야는 ▲국어국문 ▲국사 ▲철학 ▲경제 ▲경영 ▲행정 ▲물리 ▲화학 ▲생물 ▲화학공학 ▲기계 ▲재료 ▲전자 등이다. 평가 결과 369개 가운데 '국제적 수준' 또는 '국제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A등급은 112개(30.3%), '국내 우수 학술지인 B등급이 146개(39.6%), '우수 학술지로 도약 단계에 있는' C등급은 111개(30.1%)였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BK 21'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문 업

적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외국 자료인 과학 인용 색인(SCI), 사회 과학 인용 색인(SSCI)에만 의존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 학술지 게재 실적도 평가해 학문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 공포

교육부는 12월 7일 교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의 상한선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40살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 기 관장이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교사 임용 때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 교육감은 전문 직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62살 정년에만 저축되지 않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새 임용령은 2001년 3월부터 시행된다.

● 원격 대학에 모니터링제 도입

교육부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원격 대학(사이버 대학)

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12월 9일 교육부 평생 학습 정책과 관계자는 세계 처음으로 정부가 학위를 인정하는 원격 대학이 출범하는 것이니 만큼 내년 한해를 시범 운영 기간으로 간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강생들의 피해를 줄이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 대학의 수업 진행 과정이나 성적 산출 과정 등을 감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내년 2월부터 이들 9개 대학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생 교육법상의 고정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강생들이 학교측의 문제로 인한 피해로 수업 등에 차질을 빚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1개월 단위로 교육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콘텐츠 뱅크를 구축해 이들 대학간 우수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원격 대학 질 관리 평가위원회를 결성·운영하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원격 대학 스스로가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첫 사례임을 감안해 신청 16개 대학 중 9개에만 원격 대학 인가를 내주는 등 신중을 기했다고 전제하고, 되도록이면 각 대학들의 자율에 맡기겠지만, 시행 첫 해이니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행 착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학 법인 기본 재산 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전국 167개 4년제 사립 대학에 대해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7개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액은 법정 기준액인 5조 7,728억 원에 비해 2조 9,424억 원이나 부족한 2조 8,034억 원(법정 기준을 대비 49% 확보)에 불과하다고 12월 18일 밝혔다. 167개 대학 중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율이 법정 기준 이상인 대학은 47개교(28%)에 그쳤다. 즉, 120개교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학들이 1년 동안 수익용 기본 재산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은 2,268억 원(수익률은 8.0%)으로 법정 수익률(연 5%)에도 못 미친 대학은 96개 대학에 달했다.

이처럼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주로 토지와 임야 등 저수익성 부동산

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 재산 중 비중이 큰 토지(44%)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0.6%에 그쳐 고수익 재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본 재산에서 나온 수익액 2,268억 원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금은 1,353억 원이나 이 가운데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996억 원으로 74%에 그쳤다. 따라서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나온 순수익금의 80%를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토록 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법정 기준액인 80% 이상을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한 법인은 전체의 54%인 91개교 였으나, 46%인 76개교는 수익액의 80% 이하를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위 종류 및

표기 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

내년 2월 학위 수여식부터 '무용학 박사·문헌정보학 박사·전자상거래학 박사' 등 지금까지 없었던 학위가 첫 선을 보인다. 또 '의·과학 박사(M.D-Ph.D)' 등 2개 이상의 학위를 묶은 통합 학위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12월 19일 석사 27종·박사 21종으로 제한돼 있던 현행 학위 종류 제한을 폐지,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학위 종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학위의

종류 및 표기 방법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학위 종류 제한에 묶여 물리·화학 등과 같이 '이학 박사'로 불렸던 무용·체육 전공자들은 '무용학 박사', '체육학 박사'로 표기된 학위증을 받는다. 표기 방법과 관련, 일반 대학원에서 주는 학술 학위는 종전처럼 '경영학 박사', '교육학 박사' 등으로 기록하되, 전문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의 전문 학위는 학위명 뒤에 전문 분야를 괄호로 병기토록 했다.